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이행현황 및 향후 계획

2026. 6. 4.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I. 추진 배경 및 경과	1
II. 지역 바가지요금 근절 방안	2
III.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이행현황	4
IV. 향후 계획	6

I. 추진 배경 및 경과

-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앞서, 성수기나 대규모 행사시 숙박·교통·음식업 등에서 지속되는 바가지요금 문제 점검 및 대응 필요
 - ①일부 관광지·사업자 한탕주의(정보 비대칭성)에 따른 이미지 실추, ②대규모 행사 등 일시적·국지적 독점 상황 下 소비자선택권 제한
- ⇒ 지역·국가이미지 훼손 및 관광경쟁력 저하를 방지하고 시장질서 유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바가지요금 근절 노력이 중요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 '26.2.25 발표)

①정보비대칭 해소를 위한 가격(품질) 투명성 제고 ②과도한 요금인상 방지를 위한 합리적 가격형성 환경 조성 ③페널티·인센티브 등 제도적 유인구조 강화 ④민·관 공동참여형 통합관리체계 구축

- 특히, 아이돌 공연(6.12~13) 등 대규모 이벤트 계기 과도한 숙박가격 인상*, 일방적 예약취소 등 바가지요금 관련 내·외국인 불만 증대

* 부산 숙박업소, 6월 아이돌 공연주간 주말요금 직전·직후대비 평균 2.4배, 최대 7.5배(공정위, 2.13)

【글로벌 아이돌 공연 관련 숙박 불편신고 현황('26.5.29 기준)】

접수현황											
총계	신고내용별			업종별						국적별	
	예약취소	고액요금	기타	일반숙박	관광호텔	호스텔	외도민박	농어촌민박	업체미특정	내국인	외국인
311	256	48	7	253	33	12	8	1	4	87	224

-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지역관광 이미지 개선을 위한 가능한 즉각적·실효적 조치 추진 필요

☞ 여름철 성수기 전 2월 발표 대책의 각 부처 이행현황을 점검하여 추진 속도를 높이고, 특정 지역·시기의 바가지요금 대응과제도 마련·추진

Ⅱ. 지역 바가지요금 근절 방안

◇ 관계부처 합동 ‘지역 바가지요금 근절 관련 TF 회의’(5.28) 개최

- 대체 숙박시설 확보 및 대중교통 추가 증편, 범부처 특별 현장점검 등 총력 지원중

① 대체 숙박시설 확보 및 교통편의 제공

○ **(공공숙박)** 청소년수련시설, 템플스테이 등 합리적 가격의 대체숙박* 공급

* 대학교, 종교시설, 공공기관 연수원 등 유·무상 대체숙박시설 약 2,000여명분 확보(6.3 기준)

○ **(교통 증편)** 지역 지하철, 고속버스 등 관광객 편의 확보 추진

- 대중교통 연장·증편운행*(부산시), 수도권-부산 심야 고속버스 증편** 및 부산-인근 열차 증편*** (국토부), 부산-인근 시외버스 증편(경남도) 등

* 도시철도 116회, 경전철 28회 증편(21:30~00:20), 공연 종료 후(22:00~23:30) 시내버스 집중 배차 등

** 6.12~14일 22시 이후 심야(저녁·새벽) 임시버스 총 40편 증편(6.12 3→11, 6.13 5→24, 6.14 2→15편)

*** (총14회) 부전~태화강 전철, 부전~동대구 ITX 각 2회(6.12,13) / 부전~청량리 KTX이음 2회(6.12~14)

○ **(심야 콘텐츠)** 공연장 인근 심야영화 상영을 추진하여 숙박수요 분산 유도

② 공정한 가격 유도 및 합동 현장점검 · 즉각 제재

○ **(공정숙박 챌린지)** 정상적 가격 책정, 공정한 예약·취소·환불 절차 운영 등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공정숙박 캠페인 확산

- 한국관광공사·부산관광공사 협업, 챌린지 참여 숙박시설 정보 및 예약 방법을 담은 콘텐츠 제작·확산(공식 SNS, 비짓 코리아, 비짓 부산 등 활용)

○ **(자정활동)** 바가지요금 근절 및 공정관광 캠페인 등 업계 자정노력* 집중

* 문체부 숙박관련협회 간담회(5.27), 행안부-관계부처-대한숙박업중앙회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5.29, 6.8~9),

부산시-부산관광협회관광업계 자정결의 대회(6.1) 및 한국관광공사-부산관광협회-대한숙박업중앙회 공정관광 캠페인(6.8) 등

- **(특별기획수사)** 특별사법경찰이 공연장, 주요 교통거점(부산역, 서면 등) 및 관광지 중심 숙박업 특별기획수사* 추진(2.23~6.15)
 - * 미신고 숙박업 영업행위, 숙박요금 게시·준수의무 위반, 위생기준 위반 등 위법행위 점검
- **(합동 현장 점검)** 공연장 인근 숙박업소의 가격표시제 이행·표시가격 준수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추진(5.29 완료, 6.8~9 예정)
 - * 행안부·문체부·복지부·국세청·경찰청·공정위·부산시 등 참여
- 5.29일 합동 현장점검시 숙박요금 게시 철거, 과도한 요금 책정 자제, 소방안전 관리 강화 등 숙박 서비스 전반 계도
- **(신고접수·즉각대응)** 지역번호 120, 관광불편 신고센터 1330을 통해 불편 신고 수시 접수, 관할 지자체에 즉시 통보하여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
 - 신고 접수업체 점검 및 행정처분, 조세탈루 혐의 조사, 바가지요금 인정 업체에 호텔업 등급 결정시 페널티 부과 등 전방위 대응

3 담합 등 불공정행위 방지

- **(소비자 행동요령)**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 발령(5.29), 부당한 계약취소·불합리한 추가 요금 요구 등 주요 피해사례 및 소비자 행동요령 전파
 - *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 등 협력
- **(담합행위 제재)** 숙박업소간 담합행위 등에 대한 불공정 신고를 독려*하고, 사업자단체금지행위·담합 등 확인시 신속·엄정 제재
 - * (기존) 포상금 지급한도가 법 위반 행위별로 1억원에서 30억원으로 규정
→ (개정) 포상금 지급한도 폐지, 포상금 지급요율을 과징금의 최대 10%로 일원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 '26.5.21 행정예고)

Ⅲ.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이행현황

- ◇ 가격 투명성·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법률개정안 마련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절차 진행중, 페널티·인센티브 강화 및 민·관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 핵심과제 정상추진

① 합리적 가격형성 및 가격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령 개정

- (합리적 가격형성) ①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 ② 정당한 사유없는 일방적 예약취소시 제재규정 신설을 위한 법률** 개정안 마련중

* (신고·공개) 시기별 숙박요금 상한을 지방정부에 신고 → 숙박 플랫폼, 자체 홈페이지, 접객대 등 신고요금 게시 (제재) 업체가 ① 시기별 요금 사전 미신고, 또는 ② 신고요금 초과 징수시 → 제재 부과

** 숙박업(공중위생관리법), 농어촌민박업(도농교류법), 외국인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관광진흥법)

- 최대할인을 설정* 등 제주도 렌터카 요금신고제 개선(제주도조례 개정, '26.3.4)

* 비수기 대폭할인 / 성수기 할인철회 방식에 따라 발생하는 바가지요금 개선 목적

- (가격투명성 제고) 음식·숙박 가격 미표시·미준수, 택시 부당운임 적발시 즉시 영업정지 등 법적제재를 강화*하는 입법절차 진행중, 6월 시행 추진

* 1차 위반행위 적발시 제재(현행→개선) : (숙박) 경고·개선명령 또는 제재규정 부재 → 영업정지 5일 (음식) 시정명령 → 영업정지 5일 (택시) 경고 → 자격정지 30일

** 숙박업·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입법예고(3.18~4.27), 규제·법제심사(5~6월)

한옥체험업·외국인도시민박업·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 입법예고(4.23~6.2), 규제·법제심사(6월~)

음식업·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 입법예고(3.4~4.13), 규제·법제심사(5월~)

택시업·택시발전법 시행규칙 개정 : 입법예고(5.8~6.17), 규제·법제심사(5~6월)

- 한편, 지역상권 가격표시 강화를 위해 문화관광형시장 등 대상 QR코드 연동 다국어 메뉴시스템 제작 지원

* '26년 문화관광형 지원 85개 시장 대상 간담회(3.17)시 QR 다국어 메뉴시스템을 과업 사항으로 안내, '26년 백년시장 사업에도 필수 과업으로 지정하여 공고(3.25)

② 바가지 근절을 위한 페널티·인센티브 등 제도적 유인구조 강화

- **(페널티 부과)** 정부지원사업 선정·평가시 바가지업체 페널티 강화
 - '26년 문화관광형시장 선정시 가격표시 여부 반영하여 既선정('26.1월), '26~'27 문화관광축제·예비축제 선정시 바가지요금 감점('26.1, 2월)
 - 바가지업체 대상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페널티 기준 마련중(~6월)
- **(인센티브 부여)** 지방 물가안정관리 평가 우수 지방정부 대상 특별교부세 지원 확대, 착한가격업소 강화** 등 가격안정 노력 인센티브 확대
 - * '25년 30억원 → '26년 130억원, 연간 평가 후 '26.12월 지급 예정
 - ** **(지원 확대)** 착한가격업소 국비지원 예산 확대 ('25년 31억원 → '26년 49억원)
 - (지정 확대)** 지방 물가안정관리 평가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확대' 배점 상향 및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원 발굴 노력' 반영 강화(6월중 평가계획 수립시 반영)

③ 민·관 공동참여형 통합관리체계 구축

- **(법정부 대응체계)** 점검·조치·정보공유 등 쉼주기 대응체계 운영중
 - 바가지요금 신고(지역번호+120, 1330) 접수시 신속 점검·조치(지방정부), 신고·조치현황 월별 관리 및 국세청 등 관계부처*에 공유(행안부)
 - * 숙박(문체부·복지부 등), 음식점(식약처), 교통(국토부), 공산품(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재경부 등
 - 축제·이벤트 등 주요시기 행안부·지방정부·관계부처·민간단체 및 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특별 현장점검 진행
 - * 창원군향제(3.27), 고양청보리밭축제(4.17), 부산해운대모래축제(5.15) / 아이돌 공연(서울 종로3.16, 고양3.26, 4.1)
- **(민간 자율점검)** 관광업계 참여 '한국관광 공정가격·친절' 캠페인* 개최 및 전국민이 바가지요금을 모니터링하는 누리살핌이^{유쾌한} 참견쟁이** 운영('26.4~)
 - * 선포식 개최(4.30), 홍보물 배포, 숙박음식 등관광업계 자발적 참여 유도
→ 향후모니터링 점검 기반 우수 업체 대상 홍보 및 'K-관광 안심지도' 제작
 - ** QR을 통해 국민이 가격·친절 등 불편점검 → 불편 신고건은 지자체 등에 통보, 시정 유도

IV. 향후 계획

- ① **(지역 바가지요금 근절)** 단기 현안과제를 6월 공연 전까지 집중 추진
 - **(대체숙박)** 합리적 숙박여건 조성을 위해 민간·공공시설 확보 지속, 부산시 내 외국인 가정 연계 홈스테이 등 추가 숙박시설 확보 추진
 - **(현장점검)** 6.8~9일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요금표 게시·준수 의무 위반 등 적발시 즉시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처분 조치
- ②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과제 이행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특히 관련 법령 등 개정을 차질없이 신속 추진
 - ① **(법령 개정)**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 및 일방적 예약취소 제재규정 신설 관련, 연내 입법 완료 목표로 개정법률안 6월 내 발의 추진
 - * 숙박업(공중위생관리법), 농어촌민박업(도농교류법), 외국인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관광진흥법)
 - 가격인상·재판매 목적의 일방적 예약취소시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기준*을 마련하는 소비자 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개정 착수('26.6월)
 - * 소비자에 대해 계약금 환급 + 취소된 숙소요금의 200% 배상
 - 바가지로 행정처분받은 업체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취소 등 제재가 가능하도록 전통시장법 개정안 발의('26.3분기)
 - ② **(유인구조 강화)** 물가 안정관리 우수 지방정부에 특별교부세를 차질없이 지급('26.12월)하고, 정부지원사업 선정·평가지 바가지 페널티 강화
 - ▶ **(온누리 상품권)**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페널티 기준 확정('26.6월) 후 '26.9월 추석맞이 전통시장 환급행사 참여시장·점포 선정시 반영
 - ▶ **(시장지원)** 문화관광형시장 등 전통시장 지원사업 '27년 신규 선정시 평가지표로 가격표시 항목 신설('26.4분기 공고)
 - ▶ **(호텔업 등급)** 부당요금 징수시 호텔업 등급결정 평가항목 감점 확대(최대 10점→30점, '26.6월)
 - ③ **(민·관 통합관리)** 범정부 합동 현장점검(행안·문체·복지부·국세청·경찰청·공정위·지방정부 등)과 더불어 캠페인·모니터링 등 민간 자율점검 지속
 - ▶ **(자정 캠페인)** ‘한국관광 공정가격·친절’ 하반기 캠페인 선포식 개최('26.9월)
 - ▶ **(국민 모니터링)** 바가지 실태를 심층 점검하는 누리살핌단 운영(50명, '26.6월~), 주요시기(7-8월 휴가철 등) 전국민 모니터링 기반 누리살핌이 집중 홍보